

‘농촌 소멸’ 막을 10년계획 밑그림… 재생지역에 300억 투입

농식품부, 재구조화·재생 기본방침
농촌재생 대상지 기존 대비 200%↑
신규창업, 농촌지역 비중 25% 확대



전북도 주관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칠보면 거점마을로 되살아날 예정인 남전 마을의 전경. /뉴스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 대응 차 재생화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농촌재생 지원 대상지 수를 2033년까지 200곳으로, 기존(68곳) 대비 20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또 스마트 농업 등을 적극 도입해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을 기존 20%에서 향후 10년 내 2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 중장기 정책방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밝힌 바 있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일터·쉼터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우선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농촌 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

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으로 나뉜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

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대상을 지난해 기준 68개소에서 오는 2033년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기존 마을의 경우,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해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에 대

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신규주택은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 유도한다.

아울러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의 확산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먼 거리 및 낮은 인구밀도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기술 접목 모델 개발·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는 지속적 박차를 가한다.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을 2033년까지 25%로, 기존(2021년 기준) 대비 5%포인트(p)가량 늘릴 계획이다. 농업기술 혁신에 따른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함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유·무형 자원(생태·문화·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관농업지구 및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해 지역의 경관자원을 집약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중소·중견 수출기업 60곳 대상
이달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

환경부가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정부산하기관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EU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EU에 수출되

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 사업은 총 60개 사를 지원하며, EU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양식 작성 등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배출량을 보고 받고 있다. 향후 2~3년 후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모집 후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유럽연합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 발간하고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왔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유럽연합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을 비롯해 ‘이미 지급한(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스

표 시점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美, 한식문화 확산·K푸드 수출 확대 등 협력 논의

농식품장관,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최근 농식품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식문화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농산물 교역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라고 진단했다. 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또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장관은 또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지역 탄소중립 활성화 나선다

서울시등 4개 지자체와 기본계획공유

환경부가 오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중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발표에 나선다.

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